

동남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중국 경제 변화와 전망

1997년 7월 이후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주요국들이 通貨·金融危機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홍콩, 등 많은 아시아 주변국들이 동반 경제침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동아시아 주변국가들이 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동남아 위기 이후 중국 경제의 상황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율의 둔화, 실업 증대 등 경제 활력이 점차 탄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중국 경제의 어려움이 향후에도 지속된다면 중국정부는 자국경제 회생을 위해 위안(元)화 平價切下를 고려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동아시아 주변국 들은 물론이고 세계경제도 커다란 혼란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경제의 동향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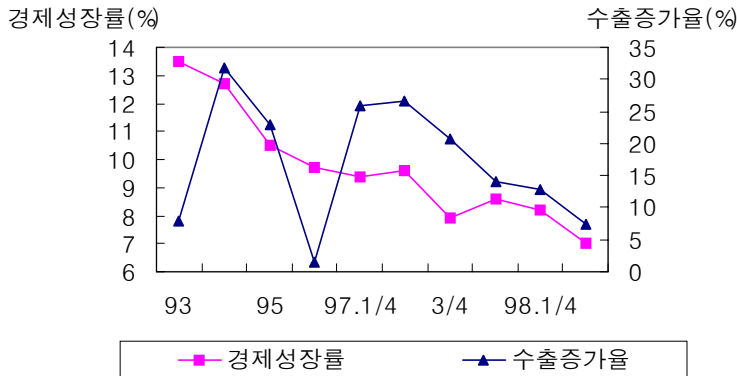
경제성장률 및 수출 증가율 둔화

중국경제는 1996년 9.7%의 견실한 성장률을 기록한데 이어 작년에도 2.8%의 물가안정하에 8.8%의 비교적 안정된 경제기조를 보여 經濟軟着陸에 성공하였다는 내외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중국은 작년 중반 시작된 동남아 통화위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7년 이후의 성장률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동남아 통화위기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중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참조). 올해 1/4분기중 경제성장률은 8.2%에 그쳐 전년 동기대비 1.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난 4월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는 금년중 중국 경제성장률은 당초 중국의 목표성장률인 8% 보다 낮은 7%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¹⁾ 향후 중국경제의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 동남아시아 외환위기 전후 중국의 경제성장률 및 수출증가율 변화

또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輸出의 價格競爭力이 주요 경쟁국인 동남아 및 우리나라 통화의 평가절하로 점차 약화되고 있다. 연간기준으로 볼때 1997년 중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20%로 1996년의 18%보다 오히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1997년의 상황을 동남아 통화위기의 전후로 구분해보면 전반기중 수출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26.3%였으나 하반기에는 17.1%로 둔화되었고, 올해

1. IMF, World Economic Report, 1998.4,



1/4분기에도 전년동기에 비해 12.8%로 더욱 낮아졌다. 올 연말에는 더욱 낮아져 수출증가율은 7.5%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계속 낮아지는 주요 요인으로 동남아 국가들의 통화가치 급락에 따른 인건비 절감을 들 수 있다. 日本貿易振興會는 매 6개월마다 아시아 주요도시의 투자관련 비용을 비교, 발표하고 있는데 지난 1996년과 1997년 말의 일반노동자 월평균 임금과 공업용지 가격을 각 도시별로 비교해 보면 1996년에는 중국에서의 임금이 훨씬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997년에는 거의 비슷하거나 역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²⁾. 이러한 달러 환산 임금의 하락은 생산비용과 수출단가를 낮추어 중국제품의 수출 가격경쟁력이 다른 동남아 경쟁국에 비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2) 다만 공업용지는 임금과는 달리 통화가치 변동에 그다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동남아 주요 도시의 공업용지 가격은 소폭 하락하거나 1996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중국의 공업용지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중국과 동남아시아 각국의 투자관련 비용 비교 (단위 : 달러)

구 분	일반노동자 월평균 임금		공업용지 가격(m ²)	
	1996년 12월	1997년 12월	1996년 12월	1997년 12월
上 海	82~186	197~219	35~40	35~40 ¹⁾
深 圳	70~160	77~163	42	42~46 ²⁾
팔라룸푸르	210~360	148~281	108~129	101~116 ³⁾
방 쿽	140~330	90~227	86	52 ⁴⁾
자 카 르 타	94~160	65~97	90	90~98 ⁵⁾
마 닐 라	130~170	185~222	..	120 ⁶⁾

주1) 50년 사용권가격

주2) m²당 연간임차료(건물포함)

주3) Hicom Shar Alam 공업단지

주4) Bangpoo 공업단지

주5) MM2100 공업단지 분양가격

주6) First Philippine 공업단지

자료 : 일본무역진흥회, 통상홍보, 1998. 3 및 東京三菱銀行, 東京三菱 Riview, 1997.10

성장둔화에 따른 실업 증대와 기업·금융부실 심화

만약 IMF의 전망대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율이 7%대 수준에 그칠 경우 문제시되는 것은 실업 증가이다. 중국은 그동안 국내경제의 안정을 조건으로 경제의 고질병이었던 국유기업에 대한 대규모 수술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약 1,200백만 명 가량의 실업자가 발생했으며, 또한 매년 신규로 양상되는 수백만 명의 노동인력에 대한 재흡수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실업증가는 사회주의의 기본이념을 저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있다.

1997년 말 현재 중국 정부의 공식 실업률 통계는 4.0%(실업자수는 5.5백만 명)으로 그리 염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정부의 실업률 통계는 상당히 왜곡되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우선 정부의 실업률 통계는 도시지역의 실업자만 고려하고 있으며, 전체인구의 약 70%를 차지하는 농촌지역의 잠재실업인구를 전혀 감안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도시지역의 고용자인 경우에도 샤깡(下崗)³⁾의 형태로 임시 휴직상태인 사람이 점차 늘고 있는데 이들은 당해 국유기업의 적자누적으로 사실상 복직이 어려울 경우 실업상태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들

3) 샤깡(下崗)이란 국유기업에서 기업이 가동을 멈추거나 혹은 직장에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최저 생활비를 받으면서 다시 일자리에 복직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을 감안한 실업률은 7~8%(실업자수 : 12백만 명)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⁴⁾.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문제시되는 것은 정부의 국유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향후 실업률이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선 정부가 7개 산업부문에 있어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감축을 단행하겠다는 보도내용만 종합해보더라도 향후 2000년까지 총 5.2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전망이다. 여기에 추가로 3~4백만 명의 정부 및 금융기관의 인력감축이 예상됨에 따라 늘어나게 될 총 실업자수는 현재 공식기준 통계의 5.5백만 명에서 약 15백만 명으로 크게 늘며, 이렇게 되면 실업률은 10%대를 넘어서게 된다.

더욱이 아시아 외환위기의 여파로 수출 둔화가 예상되며, 국유기업의 적자 및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문제가 심화되면서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도 점차 높아질 수도 있어 중국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현재 공업생산의 29%, 전체무역의 50%를 담당하고 있는 국유기업의 개혁작업 지체와 이로 인한 국유 금융기관의 부실 심화가 중국경제의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국유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소요재원 부족, 고실업 발생 등으로 구조조정을 늦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국유 상업은행들의 부실문제도 쉽사리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

적극적인 외자유치정책 추진

중국경제가 직면한 또하나의 어려움은 홍콩 금융시장의 불안이다. 홍콩은 중국의 주요 외자조달 창구이자, 대외교역의 중계기로서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최근 동아시아의 통화위기 이후 홍콩경제가 침체되면서 중국의 향후 외자 조달 및 무역 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1997년 말 현재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실투자 기준으로 453억 달러를 기록 전년대비 8.6%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계약기준으로 보면 518억 달러로 오히려 전년대비 29.3%나 감소하였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외국인투자 증가율의 둔화 혹은 감소를 우려, 최근 적극적인 외자도입정책을 추진중이다. 우선 정부는 지난 1996년 4월을 기해 철폐하였던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비수입에 대한 면세조치'를 1998년 1월부터 첨단산업에 한해 다시 부활하였다. 또한 도소매업 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국기업 신우대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⁵⁾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998년 1/4분기중 외국인직접투자(계약기준)는 8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7%의 증가세로 재반전되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홍콩, 동남아국들의 대중국 투자가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불

4) EIU, Business China, 1998.3.30, 8쪽

5) 한국경제신문, 1998년 5월 19일

구하고 미국, 유럽 선진국가들의 동남아 투자선이 대거 중국으로 전환하여 이를 보전하였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 해소의 최종대안 : 위안화 평가절하

동남아 위기 이후 중국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가져다 주는 최대 관심사는 역시 위안화의 인위적인 평가절하 가능성이다. 그동안 중국 정부의 최고지도자는 수차례에 걸쳐 결코 중국은 자국의 이익만을 내세워 평가절하를 단행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안정된 경제상황이 이를 뒷받침해 주었다. 통화가치 급락으로 동남아가 몸살을 앓고 있었던 1997년에도 중국은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었기는 하나 여전히 견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물가는 계속 3% 이내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경제의 안정기조에도 막대한 외환보유고, 장기외채 중심의 양호한 외채구조와 함께 외환·자본거래의 엄격한 통제로 투기성 핫머니에 의한 외환시장 교란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도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을 낮추는데 한 몫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주요 국내의 중국 연구기관들은 만약 중국 경제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경우 평가절하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의 일본 엔화 약세는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쯤이 될 것이냐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여기에는 중-미관계 고려, 중국의 아시아에서의 입지 강화 등과 같은 정치적 요인도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 위안화 평가절하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고려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인민폐 평가절하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중국 경제난국 타개의 일환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세계각국으로부터의 비난, 주변국의 경제 악화로 인한 중국 경제의 재충격, 홍콩 금융시장의 붕괴 등 부정적인 효과도 만만치 않아 중국 정부가 취하여야 할 최종 대안으로 남겨질 것이다.

< 표 2 > 주요 연구기관의 인민폐 평가절하 시기와 근거

절하 시기	주요 기관	근거 및 전망
98년 상반기설	현대경제사회연구원 등	- 상반기 경제성장이 만족스럽지 못 할 경우 평가절하(외신) - 순수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출증가세의 둔화에 따라 1998년 5월이후 점진적인 평가절하 예상(현대경제사회연구원)
98년 하반기설	KOTRA	- 환율변동의 효과는 6~12개월 후 나타나게 되므로(J-curve 이론), 동남아 및 우리나라의 평가절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하반기 중 평가절하 단행
99년 이후설 (혹은 단기적으로 평가절하 없다는 설)	IIE, EIU, 홍콩소재 Goldman Sachs, KIEP LG경제연구원 등	- 대규모 외환보유, 양호한 외채구조 등 거시경제 안정의 지속, 평가절하의 파장 및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 현재(적어도 1998년 중)로서는 평가절하를 단행하지는 않음. - 다만, 수출경쟁력 악화, 성장세 둔화 등 경제상황이 계속 악화되면 1999년 중 평가절하 단행 가능성 존재

긴축 위주에서 성장위주로의 경제정책 전환 예상

따라서 중국이 인민폐 평가절하를 단행하기 앞서 취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의 긴축에서 성장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이다. 그러나 과거 중국은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취하면서 빈부격차 심화, 인플레이션 상승, 금융기관과 국유기업의 부실 심화 등과 같은 부작용을 경험한 바 있어 1994년 이후 긴축기조의 정책을 펼쳐왔다. 이의 성과로 중국은 경제의 고질적 병폐였던 인플레이션률을 1994년 24.1%에서 지난해에는 2.8%까지 낮추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다시 성장과 안정의 두갈래 방침을 놓고 커다란 딜레마에 빠져 있다. 성장의 둔화가 실업 증대라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남아 통화위기는 중국경제를 더욱 어렵게해 많은 중국 연구기관들은 올해 중국 정부가 계획한 8% 성장률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중국 경제정책의 방향은 기존의 긴축기조에서 성장위주로의 무게중심 이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위해 경제성장의 양대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수출 및 외국인직접투자 증대 노력도 제도개선 등의 방법을 통해 더욱 강화될 것이다. 【全善俊】